

2024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11/3	[뉴스투나잇]국가 AI 연구거점 개소..."2028년까지 946억원 투입" [뉴스02]교육부 "26년도 이후 AI 교과서 속도 조절 검토 중"	
김홍태	11/10	[뉴스프라임]직장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될까...'지속·반복' 여부는 논란 [일요와이드]한강도 못 피한 저작권 침해...방심위 5년간 3만건 접속차단	
임윤주	11/17	[뉴스워치]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뉴스리뷰]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서 흥기 살인...40대 남성 체포	
최미연	11/24	[뉴스센터]검찰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기소...김혜경 기소유예 [뉴스현장]이재명 추가 기소에..."공직자 자격 없어" "정치 탄압"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11/3(일)	임윤주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역시 AI 발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거점을 개소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가 AI 연구거점’에서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이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AI 리더 양성 기능과 AI 산·학·연 생태계를 집약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게 됩니다.정부는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AI 연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인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국가 AI 연구거점’도 마련되면서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이 하나 둘 마련되고 있습니다.다음 달에는 AI 안전연구소도 출범해,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앞으로는 기사에 사용되는 수치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소개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내용 역시 연합뉴스TV의 지난달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본 보도의 자료화면에서도 대한민국 AI G3 도약 총력전을 간략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 및 자막 등에서 강조한 946억 원 투입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아쉬웠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쉽게 가능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의 비용으로, 해당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에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뉴스TV의 지난 다양한 AI 관련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하지만, AI 기본법과 관련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 11/10(일)	김홍태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일 뉴스프라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이 보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돌아보며 증가하는 신고 건수와 그에 따른 문제를 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고가 늘면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	이번 보도는 법 시행 5년에 맞춰 썼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다음 보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이 커지는 상황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논란과 정부의 대응책을 알리고도 있는데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가 간단히라도 제시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한다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2024 11/17(일)	임윤주	<먼저 뉴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달한 보도로, 사건 발생 자체에 중점을 둔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 적용된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별이 언급되고 피의자는 연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보는 동일한 기준으로 언급하거나, 사실상 사건 전달에 있어 불필요할 경우에는 언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소방과 경찰이 번갈아 출동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 곳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복도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같은 사안이어도 짧은 단신으로 나갈 때와 긴 리포트로 나갈 때는 담을 수 있는 정보 양이 다르고, 또 취재된 양도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제된 표현 사용과 불필요한 표현 자제는 늘 유념하고 있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숨진 여성과 함께 있던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한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에서 신고가 된 경위와 용의자의 상태 등이 추가된 보도였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앞선 보도에서 진전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정제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가 추가되면서 앞선 보도에서는 지역의 구 단위가 언급된 것에 비해, 본 보도에서는 동 단위까지 보도에 언급되고, 제목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 보도에 있어 지역 명칭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과 지적이 있어 온 만큼, 향후에는 보도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2024 11/24(일)	최미연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하사 기준으로 내년엔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6.6% 인상할 방침입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엔 6.6% 인상하여 하사 기준 월	지적해주신 말씀에 공감하며, 단신 기사의 형식상 논란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소개 못했지만, 다른 리포트를 통해 이미 소화한 적 있습니다.

	<p>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논란을 해소하고,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병사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동안 초급 간부들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여 지원율 하락과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합뉴스 TV 보도 시, 이에 따른 논란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초급 간부의 기본급 상향 지원을 보도해 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11.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7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역시 AI 발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거점을 개설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가 AI 연구거점'에서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이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AI 리더 양성 기능과 AI 산·학·연 생태계를 집약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AI 연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인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국가 AI 연구거점'도 마련되면서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AI 안전연구소도 출범해,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역시 연합뉴스TV의 지난달 뉴스

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본 보도의 자료화면에서도 대한민국 AI G3 도약 총력전을 간략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 및 자막 등에서 강조한 946억 원 투입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아쉬웠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의 비용으로, 해당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에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뉴스TV의 지난 다양한 AI 관련 보도에서 언급되었긴 하지만, AI 기본법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이었던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I 기술과 관련하여, 교육부 발표에 대해 보도한 <뉴스 02>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학년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 수 등을 조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출판사가 확정돼 변경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개선·보완 사항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도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학습 도구가 모든 학교에서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점과 우려 사항들에 대한 지적도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연합뉴스TV에서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지난 뉴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 교육부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엇이고, 내년 도입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도입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한 부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는 시청자들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사안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전한 <뉴스 투나잇>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른 지역에서는 후진하던 택시가 다른 차량과 식당을 들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70대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작 미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2013년 8.2%에서 지난해 19.9%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운전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본 보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에 집중하여 보도하였는데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인데요, 보도에서 언급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70대 운전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대전시 등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노인 연령 기준 논의가 지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 노인 인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와 관련하여 보도한 <일요 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지정된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로, 40여 년이 흐른 지난 2022년에는 82.7세로 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3년 전보다 1.1세 높아진 건데,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도 두 배 늘었습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급증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급증하면 부양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보도를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의에 있어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으로, 현재 노인 연령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보도에서는 부양 및 복지 혜택 등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뿐만 아니라, 앞선 보도에서 살펴보았던 운전 능력을 포함하여, 경제·사회 활동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 재정부 등 구체적인 마련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 보도에 있어 함께 보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까지 되었지만, 이름만 바꿔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특정 콘텐츠는 한 달 방문 횟수가 2억회를 돌파하고, 저작권 피해가 5조원대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곤 있지만 사실상 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첩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자 추적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콘텐츠 불법 공유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본 보도는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보도였는데요. 현재 관련 법이나 처벌의 미흡함을 보다 더 강조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말미에 언급한,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인용한 현행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함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오히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되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11.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7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일 뉴스프라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으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에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지만, 범위반이 아니라고 끝난 사건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데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으면서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피해 입증에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이어야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돌아보며 증가하는 신고 건수와 그에 따른 문제를 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고가 늘면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논란과 정부의 대응책을 알리고도 있는데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가 간단히라도 제시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한다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로 접속차단을 시행한 사례가 3만건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천39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을 의결하는데요,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불법 유통 대상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방심위는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저작권 불법 유통과 방심위의 대응 현황을 상세히 전하며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가 3만 건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통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마저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함께 가장 큰 문제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점과 단속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유통의 문제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금전적 수치로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영화, 드라마, 웹툰 업계가 입는 연간 피해액이나 창작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저작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내용과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가 있었을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법제처가 아시아 7개국 법제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는데요, 어느새 AI가 일상이 되어버린 미래에,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번에는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리걸테크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법령을 번역하거나 맞춤형 법안을 추천하는 등,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리걸테크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등장하여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미래 법률 혁신 프로그램'과 중국의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태국의 '인공지능 개선 프로젝트' 사례 등이 공유됐는데요, 법원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몽골과 다양한 전자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경험, 그리고 620만 건 이상의 법령 정보를 개방한 우리 법제처 사례도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하며 제도개선 노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기간 원격소송이나 온라인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한 리걸테크 해법들이 나왔지만 법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으며,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는데요, 나아가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협의체는 내년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아시아 각국의 대응을 다루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잘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법률서비스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과 각국 사례를 소개한 점이 시청자들에게 리걸테크의 활용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걸테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법률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법령 번역이나 법안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설명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리걸테크 도입에 따른 AI 판단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법률서비스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언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A씨가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해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는데요, A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송파구에서도 유모차에 탄 아이와,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무면허 역주행 사고와 그 피해 상황을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전후 정황이나 피해 정도 그리고 경상을 입은 9명의 상태와 차량 피해 규모, 송파구에서 발생한 첫 사고의 피해자 상태도 자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보도는 중요한 사고 사실과 신경안정제 복용 등 사고 원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과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기 위한 내용도 추

가로 보도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5일 뉴스센터에서는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은 배추, 무, 토마토, 돼지고기 등으로 특히 김장 재료인 배추, 무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배추와 무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추와 무는 길었던 폭염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 출하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준 배추의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4천810원으로 떨어졌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돼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 동향을 전달하며 중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의 원인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민감한 요즘 시기에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안내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김장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11. 1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뉴스를 통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지 연합뉴스TV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도움이 되고자 의견 전합니다. <뉴스위치>, <뉴스리뷰>, <토요와이드>에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과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더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달한 보도로, 사건 발생 자체에 중점을 둔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 적용된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별이 언급되고 피의자는 연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보는 동일한 기준으로 언급하거나, 사실상 사건 전달에 있어 불필요할 경우에는 언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소방과 경찰이 번갈아 출동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 곳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복도에서 타는 뱀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숨진 여성과 함께 있던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한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에서 신고가 된 경위와 용의자의 상태 등이 추가된 보도였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앞선 보도에서 진전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정제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가 추가되면서 앞선 보도에서는 지역의 구 단위가 언급된 것

비해, 본 보도에서는 동 단위까지 보도에 언급되고, 제목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력 범죄 보도에 있어 지역 명칭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과 지적이 있어 온 만큼, 향후에는 보도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 와이드>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검거 후 만나질 이상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체포 당시 A씨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 인근에서 두 남녀가 여러 차례 다투었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본 보도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추가된 보도였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실제 연인 관계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제목에서 강조한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실제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여부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연인이 아닐 경우 교제 범죄가 아닌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위의 강력 범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강력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 앱 수수료 상생 방안에 대해 보도한 <뉴스 잇> 살펴보겠습니다.11차례 개최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높은 수수료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최고 7.8%, 쿠팡이츠는 최고 9.5%의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제안했는데, 기존 9.8%인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점 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마지막 수정 상생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한 공익위원들이 추가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은 최종 결렬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수수료를 상한제 등과 관련하여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앱은 소비자 5명 중 4명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배달앱 관련 사안은 민생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만으로도 현재의 수수료율, 입점 업체와의 의견 차이,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자료 화면으로 제공된 화면 가운데, 언급된 배달 앱 1, 2위 업체 외 다른 업체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해당 업체는 상생협의체와 단독 합의를 완료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날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는 소비자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합의를 완료한 업체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실제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고민 상담 글을 보여주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전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도박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실제 도박에 손을 대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청소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난 1년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직접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된 약 1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전 단속기간 검거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 28배나 폭증한 것입니다.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바카라나 블랙잭 등 카지노가 8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과 캐주얼게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집단성라고 설명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사이 하나의 놀이나 오락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쓴 금액은 총 37억원, 1인당 평균 78만원에 달했습니다.앵커 멘트에서도 강조되었듯, 직전 단속기간 검거 수치 대비 28배나 증가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의 문제인 만큼,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나 교사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성인들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도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97%인데요, 전문가가 남학생의 성향을 설명해주었듯, 더 깊이 분석하고 접근해야 각 집단에 맞는 교육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페리디들과 관련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을 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르는 것처럼 합성해 개사한 페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제작된 이 페리디 영상은 노랫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채널엔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노래 '아파트'를 페리디한 '로켓트'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페리디 영상을 전했는데요, 페리디한 대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최근 북한의 이슈와 관련하여 전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는 단순히 영상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칫 단순한 흥밋거리를 전달하는 보도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페리디 대상이 특수한 만큼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는 것 역시 보도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보도될 만큼 높은 영상 조회수나 좋아요 수 등이 언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4. 11. 24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

입 혐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을 보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억 653만 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식사 대금과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함께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여야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다섯 건의 재판에 직면한 것을 비판하며, 그의 혐의가 너무 많아 기억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비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사건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적 긴장감을 전달하고 여야의 입장을 균형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의 줄다리기를 다루는 것을 넘어, 도덕적,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정치적 공방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한 군대를 통제할 기구까지 설치하고, 여기에 장성 7명을 보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파병은 북러 군사 협력의 심화와 군사기술 유입 가능성 등의 한반도 및 국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6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명 이상 파병되었으며, 이들은 장교들로 구성된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최대 1만 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될 경우 연간 최대 10만 명의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해

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은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방어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 진척 상황을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파병된 북한군이 무인기 운영과 박격포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연합뉴스 TV의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곳에는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총 7명의 북한 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하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의 충돌이 이미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두 기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숨기려는 전략을 분석하고, 군사 기술이나 자원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북러 관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 점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반응과 제재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상대적으로 단순화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동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나올 군사적 결과와 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TV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움직임이나 대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장 월급 200만원이 내년부터 실현됨에 따라 초급 간부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5년 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학군단의 경쟁률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하사 기준으로 내년엔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6.6% 인상할 방침입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가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 6.6% 인상하여 하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논란을 해소하고,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입힙니다. 병사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동안 초급 간부들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여 지원을 하락과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합뉴스 TV 보도 시, 이에 따른 논란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초급 간부의 기본급 상향 지원을 보도해 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해 지자체에 광고비를 강요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협회는 사과를 하고 협회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언론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에서 외부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공무원들에게 광고비를 요구했고,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협회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실군 공무원에게 광고비를 요구해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언론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잘못된 언론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협회의 실체와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사이버 언론의 행태를 적절히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공공기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문제로, 언론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명한 홍보비 운영과 언론 윤리를 무너뜨리며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적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할 부분입니다. 언론의 자정 능력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언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단순히 문제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발전하면 더욱 효과적인 기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1월 3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1월 10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1월 17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1월 24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